환 경 부

훈계 · 시정 요구

제 목 습지복원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창녕군

관 련 자 ① 창녕군 ○○○○과(전 ○○○○과) 지방○○주사 ○○○

② 창녕군 ○○읍사무소(전 ○○과) 지방○○주사(전 지방○○주
사보) ○○○

③ 창녕군 ○○읍사무소(전 ○○과) 지방○○사무관(전 지방○○
주사) ○○○

내 용

지방○○주사 ○○○는 2011. 1. 1.부터 2014. 12. 31까지 ○○○○과에서 “○○늪 습지개선지역 훼손지 복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담당책임자로 근무하였으며, 지방○○주사 ○○○은 2012. 7. 26.부터 2014. 4. 30까지, 지방○○사무관 ○○○은 2013. 7. 26.부터 2014. 12. 31까지 “○○늪 습지개선지역 훼손지 복원사업”의 계약담당 부서인 ○○○과에서 선금 지급 및 정산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각각 실무담당자와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

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선금신청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00억 원 이상의 공사는 계약금액의 30%,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공사는 계약금액의 40%, 20억 원 미만의 공사는 계약금액의 50%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연도 안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 안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며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보증서를 제출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창녕군 ○○○○과는 창녕군 ○○면 ○○리 일원 192,250m² 면적에 사업비 13,883백만원(국고 9,016백만원, 도비 2,147백만원, 군비 2,720백만원)으로 “○○ 늪 습지개선지역 훼손지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2013.6.24.에 계약금액 4,337백만원으로 (주)○○○○(2013. 6. 26~2016. 12. 31)과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창녕군 ○○과는 위 계약체결 후 2013. 6. 27.에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 1,820백만원을 신청받아 공사계약금액(4,337백만원)의 약 41.96%에 해당하는 1,820백만원을 2013. 6. 28. (주)○○○○에 지급하였다.

창녕군 ○○○○과는 당초 위 지역이 농지로 편입되어 있어 습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을 받고자 하였으나, 당초부터 위 사업이 습지복원보다는 관광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지전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협의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4. 3. 14., 2014. 4. 17. 통보받음에 따라 농지전용 재협의를 위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였으며

농지를 습지로 전용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군관리계획시설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등 다수의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여 공사계약 이후에도 최소 1년 이상 공사착공이 불가능 하였다.

창녕군 ○○○○과는 2013. 6. 24.에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3. 6. 26.에 공사착수를 하여야 함에도 위 사유로 인하여 공사착공을 하지 못하였고, 720일 지난 2015. 6. 16. 되어서야 뒤늦게 “군관리계획시설(유수지) 결정지연”을 사유로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였고, 위 군관리계획이 결정된 이후인 2015. 11. 1.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계약상대자인 (주)○○○○은 당초의 공사착공일 보다 856일이 경과한 2015. 11. 1.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6. 4. 29.에 제1차 기성금 533,070천원을, 2016. 5. 31.에 제2차 기성금 421,346천원을, 2016. 6. 29.에 제3차 기성금으로 710,799천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1. 공사계약 선금지급 확인 부적정

창녕군 ○○○○과는 2013. 6. 24. 계약을 체결하면서 “○○늪 습지개선지역 훼손지 복원사업”의 행정절차가 모두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도 공사착공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예산조기집행 및 예산 불용을 우려하여 무리하게 당해 연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2013. 6. 5. 경상남도 ○○○과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였으며, 2013. 6. 7. 경상남도 ○○○과로부터 계약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창녕군 ○○○과에 도급공사계약을 요청하였으며

2013. 6. 28. ○○○과로부터 선금지급 사실을 통보 받은 후, 농지전용협의 후속 조치 등의 사유로 공사지연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어 ○○○과에서 선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늪 습지개선지역 훼손지 복원사업”의 추진 및 선금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주사 ○○○는 담당책임이 있다.

2. 공사계약 선금관리 부적정

창녕군 ○○○과는 2013. 6. 28. 선금 1,820백만원을 (주)○○○○에 지급한 이후, 농지전용에 따른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공사를 착공할 수 없었으며, 행정절차가 완료된 이후인 2015. 11. 1.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회계연도가 끝나는 2013년 12월, 2014년 12월 등 2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전혀 사용하지 못한 선금 1,820백만원을 회수하여야 했음에도

관련 지침대로 선금을 관리하지 않아,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지급받은 2013. 6. 28.부터 최초 기성이 지급된 2015. 11. 1.까지 856일 동안 공사도 하지 않고 선금 1,820백만원을 보유하게 하였다.

정부합동감사 시(2016. 11. 14~2016. 11. 30) 계약상대자가 선금 1,820백만 원을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수익을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연도별 대출 평균금리 4.143%를 곱하여 복리로 계산한 결과

선금 1,820백만원이 (주)○○○○에 지급됨으로써 “○○늪 습지개선지역 훼손지 복원사업”의 사업비에 추가되어야 할 이자수입 181,786천원이 계약상대자의 이자수입으로 발생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년도별 대출평균금리, 한국은행 통계월보 발췌>

년 도	2013	2014	2015	평균이자율 (2012~2016)
이자율	4.64	4.26	3.53	4.143

<계약상대자 부당수익 발생금액>

(단위 : 천원)

선 금	보유일수	이자율	부당이익	감사시 지적
1,820,000	856일 (2013. 6. 28.~ 2015. 11. 1.)	4.143%	181,786 [산출식] 1,820,000천원 $\times(1+4.143/100)^{(856/365)}$	예산낭비 (181,786)

위와 같이 “○○늪 습지개선지역 훼손지 복원사업” 선금 관리 부적정과 관련하여 지방○○사무관 ○○○은 담당책임이, 지방○○주사 ○○○은 실무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창녕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공사계약 상대방에게 부적절하게 지급된 선금에 대한 발생 이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하는 등 적의 조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